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

- 구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중심으로 -

손은신* · 배정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I. 서론

최근 도시에서 근대 건축물이나 산업유산, 문화유산을 비롯한 기억의 경관을 보존 및 활용하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움직임의 배경으로 근대 역사가 남긴 흔적을 문화적 유산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역사적 사고와 관점의 등장, 기능을 다한 산업시설 및 인프라스트럭처의 효율적 재활용, 또는 도시민을 위한 공공 공간의 필요성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의 뒤스부르크-노르트 파크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파크(post-industrial park)의 선구적 사례가 되었고,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은 도심의 거대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오픈스페이스로서 수많은 이슈를 낳는 영향력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동양의 파리라 불렸던 중국 상하이에는 20세기 초 제국주의에 의해 형성된 조계지역에 남겨진 식민지배의 흔적과 구 사회주의의 경관을 도시재생에 활용하기도 했다(한지은, 2011).

다양한 유형의 기억의 경관 중 '근대 역사 경관'은 역사적 관점에서, 특히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존과 철거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대개 19-20세기에 형성된 근대 역사 경관에는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 분쟁, 국가 간 대규모 전쟁 등의 기억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근대 역사 경관의 역사적 특성은 곧 근대라는 특정 시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한다. 이처럼 근대 역사 경관이 역사적 관점에서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 대개 해당 경관의 보존 및 철거에 관한 수많은 논의와 담론이 형성된다.

오늘날 보존과 철거 사이의 이같은 논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990년대에 이르러 냉전체제 와해 및 사회주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을 이룬 근대시기 제국주의 피지배 국가들의 식민지사 청산이 활성화되면서 러시아의 레닌 동상 철거를 비롯하여 부정적으로 인식된 기념물, 장소 및 경관 등이 적극적으로 철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세계 정세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1990년대에는 적극적으로 철거되던 기억의 경관들이 오늘날에는 철거되지 않는다는 것

이 다소 새롭고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문화유산의 유형으로서 갈등과 트라우마, 재난을 기념하는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라는 용어의 등장 또한 최근의 새로운 보존 경향을 반영한다(Rico, 2008).

이처럼 근대 역사 경관은 오늘날 도시재생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새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조경·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주목하는 대상이다. 특히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과 기억에 대한 논쟁은 반드시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많은 역사적 층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 사이에서 가치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한국 식민지배의 상징이었던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근대 역사 경관을 둘러싼 보존과 철거, 또는 복원과 해체 사이의 쟁점을 결정짓는 주요 사회적 배경 및 가치 기준을 도출한다.

II.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논쟁

본 연구는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를 판단하는 주요 가치 기준 및 사회적 배경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의 상징적 경관인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논쟁을 살펴본다. 논의를 위한 사례 대상지인 구 조선총독부는 1910년 세워진 식민통치기관으로 당시 서울 광화문 바로 뒤편에 세워졌으며 세종로의 중심축과 미주보던 건물이다. 1945년 광복 이후 '중앙청'으로 불리며 정부기관의 주요 건물로 활용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건물로 이용되다가, 광복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폭파를 통한 해체가 시작되어 이듬해 11월 완전히 철거되었다.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1945년 광복 직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당시 관공서 건물 부족과 철거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미뤄져왔다(이현희, 1990), 그러나 1986년 이 건물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재개장되면서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16R1D1A1B03933802)

점차 철거 논의가 불거졌으며 1991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건물의 철거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건물의 보존과 철거 논쟁이 점차 가열되는 양상을 보인다. 당시 국민적 정서와 정책 추진 방향은 대체로 철거로 기울었으나(동아일보, 1993. 8. 10), 철거 비용 문제,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문제, 건축물로 상징되는 식민지기 역사의 보존 및 교육 주장 등에 기반한 반대 여론에 따라 지속적인 철거 찬반 논쟁(동아일보, 1990. 12. 6.; 한겨레, 1991. 6. 21; KBS, 1991. 3. 1; MBC, 1991. 3. 3; MBC, 1991. 8. 24 등), 중앙박물관 이전 절차에 따른 총독부 선철거-박물관 선건립 논쟁(한겨레, 1993. 10. 5) 등이 제기되었다.

철거 논쟁 당시 조선총독부 건물의 향방에 대하여 건축가 장세양은 “1.현 위치 보존, 국립박물관의 기능 유지, 2.현 위치 보존, 일제침략사관으로 활용, 3.철거, 4.이전”(동아일보, 1990. 12. 6)을 꼽았는데, 이는 당시 사회에서 최대한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물의 보존 및 철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가 철거된 1995년을 중심으로 전후 약 10년간의 관련 여론을 신문기사, 동영상, 관련 문헌 등을 중심으로 국내 여론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총독부 건물 철거 논쟁과 관련된 주요 사회적 맥락 및 가치 판단 기준을 도출하여 오늘날 근대 역사 경관의 가치 평가에 적용하고자 한다. 주요 자료 중 신문기사의 경우 ‘조선총독부 철거’를 키워드로 검색한 1980-1999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기사 중 관련 기사 492건을, 동영상은 철거 논쟁 관련 TV 프로그램 및 관련 뉴스 자료를 참고하였다. 관련 문헌으로는 1990년대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문제를 다룬 논문 및 저서와 200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또 다른 의미의 관점에서 바라본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III. 논쟁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이 장에서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논쟁을 사례로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 및 철거 간 논쟁의 주요 쟁점을 각 주제별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쟁점은 오늘날 보존과 철거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근대 역사 경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시사점을 갖는다. 앞의 문헌 분석을 통해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논쟁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 및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각 주제별 주요 쟁점 및 이슈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1. 새로운 역사적 사실의 발견과 대응

1980년대 후반 과거 경복궁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경복궁 복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한겨레, 1988. 9. 20; 경향신문, 1990. 9. 5; 동아일보, 1991. 1. 28). 이에 따라 민족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경복궁을 비롯한 옛 고궁 건물들의 복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경복궁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이전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1986년 본 건물이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상징적인 민족 문화 유산의 건물로 재개장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었다. 중앙홀 벽에 그려진 벽화가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일본 민담 이야기를 담은 ‘내선일체 벽화’라는 논란과(동아일보, 1986. 10. 18), 조선총독부 건물이 풍수지리적으로 조선의 기맥을 막고 있으며 ‘大日本’이라는 한자를 형상화하여 일제가 영구적 식민통치를 꾀하였다는 비판(이현희, 1990; 경향신문, 1993. 4. 9; 조선일보, 1997. 12. 11)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을 조선총독부 건물에 재개장하며 “영육의 현장을 영원한 민족의 교훈으로” 삼는다는(경향신문, 1982. 3. 16; 동아일보 1982. 3. 17) 박물관 입지의 의미는 사라졌고 총독부 건물 철거와 박물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4년이 조선이 한양에 도읍을 정한 “정도 600년의 해”(동아일보, 1994. 1. 5)이며, 총독부 건물이 철거된 이듬해인 1995년이 광복 50주년(조선일보, 1995. 8. 16)이었다는 점에서 주요 역사적 과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 재정적 여건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논쟁은 해방 직후인 1945년 가랑부터 제기되었으나 당시 열악한 국내의 경제 상황에 의해 미뤄져 왔다(이현희, 1990). 199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조선총독부 철거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했지만 당시 비용으로 1천억 원 이상이 추산되는 총독부 건물 철거 및 박물관 신축 비용(한겨레, 1992. 12. 29; 조선일보, 1993. 8. 11)은 여전히 철거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문제로 꼽혔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민 모금 운동을 벌여 건물 철거에 보태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경향신문, 1992. 10. 29; 한겨레, 1992. 12. 29).

3. 현재 경관의 기능과 이용 방식

구 조선총독부 건물은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박물관 이전에 따른 국보급 문화재의 보관 및 이전 문제(이선복, 1995; 한겨레, 1993. 11. 6)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총독부 건물 해체 이후에도 이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었다. 용산 국립박물관 완공 이전까지 이용하던

경복궁 내 임시 박물관에 비가 새는 등(조선일보, 1997. 5. 15) 유물 보존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박물관 이전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졸속 추진이자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한겨레, 1996. 10. 2; 경향신문, 1999. 6. 3).

4. 건축적·도시적·역사적 정책 재구성

서울이라는 도시적 규모에서는 건축적·도시적·역사적 측면에서 정책적 변화에 따른 도시 공간의 재구성이 나타났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 방침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 옛 고궁 건물 복원 정책 추진과 함께 청와대 또한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관청 건물인 구본관을 없애고 이를 대신할 새본관을 준공하였고(동아일보, 1991. 9. 4), 일본식 건물로 비판받던 창경궁의 장서각이 철거되었다. 장서각 철거 당시 동아일보는 “이로써 일제가 조선의 5대궁을 훼손하기 위해 지은 건물은 조선총독부 청사(현 국립중앙박물관)만 남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92. 12. 30).

한편 용산에 위치한 미 8군의 이전계획 및 용산공원 건립 계획이 세워짐에 따라 이전할 만한 부지를 찾지 못하던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 부지로 입지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고(한겨레, 1993. 8. 11; 조선일보, 1993. 11. 6), 이에 따라 구 총독부 건물 철거 계획은 점차 본격화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5. 관련 국가의 반응과 개입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논쟁과 관련하여 특히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얽혀 있는 일본의 반응이 철거 논쟁의 주요 요소로 등장한다. 1910년 총독부 건설 당시 광화문 철거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던 일본 민속학자 야나기 소오에쓰(유종열)는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한국 문화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동아일보, 1984. 9. 19),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실려 있던 그의 철거 반대 글을 일본 고교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침략 역사를 미화하면서(동아일보, 1982. 4. 13; 1982. 7. 7) 역사 논쟁이 일어난다.

조선총독부 건물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근대건축사 연구회라는 단체가 1991년 옛 총독부 건물의 보존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면서 논란이 과열되었다(한겨레, 1991. 6. 4).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본인의 관광 명소이자 기념사진 촬영지라는 점 또한 국민적 공분을 샀다(경향신문, 1993. 5. 21; 동아일보, 1995. 8. 4). 특히 철거 시기가 다가오자 일본의 언론들은 건물 철거 방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상당한 비판적 시선을 보냈는데(경향신문, 1994. 1. 27; 동아일보, 1995. 8. 16), 이러한 일본의 반응은 오히려 국내의 반일감정을 더욱 급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과열된 반응에 대해 김백영(2007)은 당시의 역사적 인식이 일부 왜곡과 오해에 의한 “민족적 장소성의 재구성”이자 “집합기억의 발명”이었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 평가로 인해 보존과 철거 사이의 논쟁이 발생하는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 및 철거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과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보존과 철거 양방의 쟁점적 논의를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논쟁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오늘날 근대 역사 경관의 가치 판단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약 20년 전 논쟁이 되었던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사례를 다루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쟁점적인 근대 역사 경관의 역사적 요소가 지니는 가치를 평가하고 그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의 주요 설계 대상지 중 하나인 서울역 고가, 세운상가, 용산공원 등의 근대 역사 경관은 여전히 합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역사적 쟁점을 갖기 때문에,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상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근대 역사 경관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경관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남겨지는 기억’으로, 경관의 특성을 형성하는 내러티브로, 혹은 실제 경관의 이용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참고문헌

1. 경향신문 1982년 3월 16일; 1990년 9월 5일; 1992년 10월 29일; 1993년 4월 9일; 1993년 5월 21일; 1994년 1월 27일; 1999년 6월 3일.
2. 김백영(2007) 상징공간의 변용과 집합기억의 발명: 서울의 식민지 경험과 민족적 장소성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28, 188-221.
3. 동아일보 1982년 3월 17일; 1982년 4월 13일; 1982년 7월 7일; 1984년 9월 19일; 1986년 10월 18일; 1990년 12월 6일; 1991년 1월 28일; 1991년 9월 4일; 1992년 12월 30일; 1993년 8월 10일; 1994년 1월 5일; 1995년 8월 4일; 1995년 8월 16일.
4. 이선복(1995) 총독부건물 중앙돔 상부에 내걸린 노란카드. 사회평론길 1995년 9월호.
5. 이현희(1990) 조선총독부 청사는 철거돼야 한다. 한국논단 13(1), 104-111.
6. 조선일보 1993년 8월 11일; 1993년 11월 6일; 1995년 8월 16일; 1997년 5월 15일; 1997년 12월 11일.
7. 한겨레 1988년 9월 20일; 1991년 6월 4일; 1991년 6월 21일; 1992년 12월 29일; 1993년 8월 11일; 1993년 10월 5일; 1993년 11월 6일; 1996년 10월 2일.
8. 한지은(2011) 근대역사경관을 활용한 도심재생-상하이 구 조계지역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6(5), 626-647.
9. KBS(1991) KBS뉴스초점. 1991년 3월 1일.
10. MBC(1991) MBC리포트. 1991년 3월 3일; 생방송 여문광장. 1991년 8월 24일.
11. Rico, T(2008) Negative Heritage: The Place of Conflict in World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10(4), 344-352.